
방송통신위원회

2020년도 업무계획

2020. 1.



방송통신위원회



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4
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	5
②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	8
③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	11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4
【별첨】 업무계획 요약(인포그래픽)	15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1. 주요성과

□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

- (언론자유 지수 상승) 정부출범 2년만에 '17년 63위에서 '19년 41위로 상승
- (방송의 공정성 제고)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·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('18.12월),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(유료방송 다양성 조사·인수심사 사전동의 신설, '19.12월) 마련
- (재난방송 강화) 긴급재난시 경보음 송출 등 재난방송체계 고도화 ('17.12월), 재난방송 실시기준 개정('19.12월)과 주관방송사 역할 강화

□ 공정·상생의 시장 생태계 조성

- (상생기반 마련) 「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*」 ('17.12월), 「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**」 ('19.1월) 수립
 - * 독립창작자 인권 선언문 선포('18.11월),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('19.7월) 등
 - ** 상생협력 선포식 및 사전제작 영상물 제작비용 분담기준 제정('19.6월)
- (규제 형평성 제고)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종편PP 적용('19.6월), 지상파·종편PP 방송통신발전기금 동일 기준 적용('19.8월), 종편PP 의무송출 규정 폐지('19.12월)
- (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규제 해소)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('19.3월), 「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」 마련('19.12월)
- (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) 글로벌 OTT 국내 본격진출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연합OTT 출범을 지원('19.8월)하고 한·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('19.3월)
- (공정경쟁 환경 조성)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
 - ※ 이동통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 과징금('18.1월), 결합상품 해지 제한 행위 과징금('19.6월),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차별적 지급관련 시정조치('19.10월) 등

□ 시청자 복지와 이용자 보호 강화

- (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)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*, 수어영상 크기·위치 자율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수어 방송 본 서비스 개시('19.7월)
* 누적보급률 '17년 57.5% ⇒ '18년 69.7% ⇒ '19년 83.5%('21년 100% 목표)
- (미디어격차 해소)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충('19년까지 8개소 개관), 전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*, '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' 운영**
* '18년 25.3만명 → '19년 28.2만명 / **252개소 방문, 15,288명 이용('19년)
- (방송통신 비용 부담 경감) 체납 가산금 인하, 면제절차 간소화 등 TV 수신료 감면 제도개선('19.7월),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('17.10월)
- (이용자 보호 강화) 「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」('17.9월), 「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」('19.2월) 등 종합대책 수립, 통신분쟁조정 제도 도입('19.6월), 통신장애시 손해배상 확대('19.10월) 등
- (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) 「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카르텔 방지대책」('19.1월),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삭제·차단 의무화('19.6월) 등
- (개인정보보호 강화)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('18.4월, 신용 카드사),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화('19.6월),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도입('19.6월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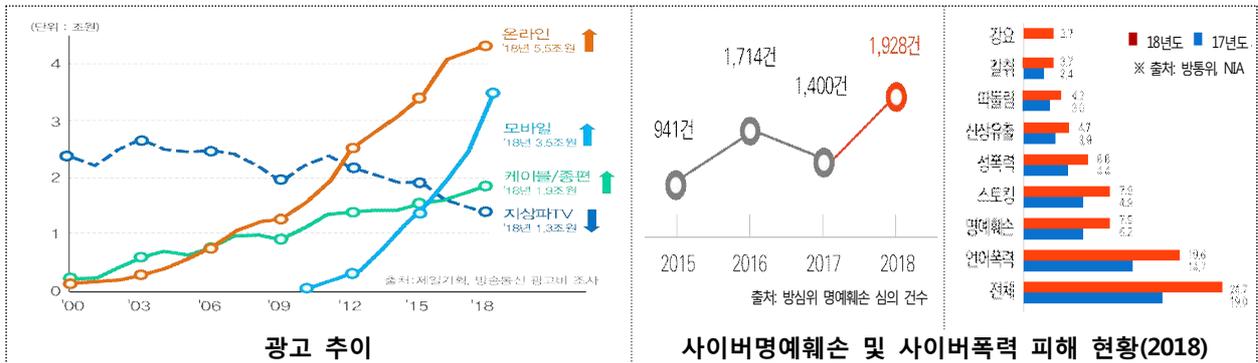
2. 보완과제

-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편성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
- 방송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지상파UHD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, 방송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
- 다크웹,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인터넷 이용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
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-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,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,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 본격화
-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가치가 약화되고, 방송통신 산업의 재정적·구조적 어려움도 가중
- 또한, 5G·인공지능(AI)과 같은 기술발전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는 늘어났지만, 이용자 피해 유형이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



2. 업무추진 방향

-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, '미디어 빅뱅시대' 경쟁력의 원천인 고품질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
- 미디어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, 미세먼지 등 재난방송 확대
-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, 어르신·아동·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복지 증진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비전

활력있는 방송통신, 신뢰받는 미디어

정책 목표

주요 업무

활력있는 방송통신
생태계 구축

- ①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
- ②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
- ③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

신뢰받는
방송환경 조성

- 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- ②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
- ③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

방송통신 이용자
권익 증진

- ①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
- ②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강화
- ③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

1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

□ 개 요

- 미디어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, 미래 지향적 제도를 정립하는 한편,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방송통신 분야 상생 도약 기반 마련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

- (방송규제 대폭 개선)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방송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 - 권역별 상호검영규제 개선, 방송기술결합 심사 완화 등 방안 마련('20.하)
 -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, 가상광고,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* 해소('20.하)
 - * 중간광고(지상파 금지 유료방송 허용), 가상간접광고(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/100, 유료방송 7/100) 등
 -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(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)를 통해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, 미디어랩 업무영역 확대(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광고까지 확대)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 추진('20.하)
 - 1개 국가 수입프로그램(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) 편성 상한(80%) 개선, 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 등('20.하)
- (미래지향적 규제 개편)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'동일 서비스, 동일 규제'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
 - 신용합서비스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제고
- (신규 ICT서비스 규제예측성 제고) 기술발전으로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 추진에 대한 규제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원칙 제시 및 진입규제 완화
 - 지능정보서비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I 기반 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 사전제시

- 위치정보를 활용한 5G·AI 관련 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(허가제→등록제)(연중)
- (정책추진 시 환경변화 고려) 세계 최초로 도입(17년)된 지상파 UHD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경영상황, 해외현황 등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
 - 「UHD방송활성화 특별위원회」를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, 의무편성비율의 현실화 및 유료방송 플랫폼으로의 재송신 등 검토(7월)

②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

- (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) ‘미디어 빅뱅’ 시대 성공전략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점검 강화
 - 방송콘텐츠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문화적 다양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EBS, 지역방송, 공동체라디오, 통일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 지원 강화
 - ※ '20년 예산 : EBS 283억원, 지역방송 40억원, 공동체라디오 2억원, 통일프로그램 3.4억원
 -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및 종편PP에 부가한 재허가·재송신 조건(약 9,000억원)*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(연중)
 - * 지상파 3사(UHD) 약 3,000억원, 지역방송 약 1,100억원, 종편PP 약 5,000억원
- (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) 방송콘텐츠가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도로 지원 추진
 -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송 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(7월) 하고,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, 제작지원, 인력·장비 출입국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를 위한 공동제작 협정체결 확대
 - ※ 신남방(인나·태국)·신북방(러시아·터키)·북미(캐나다) 등 거점국가 대상 협정 체결 추진
 -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*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 (3.30~4.2)하여 방송한류 향후 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마련
 - * MIPTV : 매년 3월말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며, 100여개국, 3,500여개 방송사, 1만명 이상 참여
 -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공영방송 등이 보유한 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역량있는 제작자가 저렴하게 활용하도록 개방 검토
- (신남방 국가 OTT 진출 지원) 국내 OTT의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 진출 및 한·아세안 OTT로 확대발전 등 지원(연중)

③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

- (국내외 규제형평성 제고)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엄정 조사·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
 -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제 시행 점검,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자 피해 조사
 - 주요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,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'이용자 보호업무 평가' 실시(10월)
- (방송시장 조사실효성 제고)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, 현장조사권 도입으로 방송시장 조사업무의 실효성 확보
 - 자사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(방송차단), 품질(해상도) 저하 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추가('20.하)
 - 유료방송 플랫폼(SO·위성·IPTV)의 금지행위 조사 시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조사권 규정 도입 추진('20.하)
- (불공정 개선·상생협력) 방송통신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협력 환경 조성
 - 유료방송시장 과다경품, 단말기유통 과정의 비정상 영업채널,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집중 점검
 - 5G 기반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중소CP 간 상생협력 유도
- (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) 방송 분야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외주 제작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으로 방송분야 상생협력 모델 정착
 - 지상파·중편PP 재허가(재승인) 시 「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」(19.7월)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
 - 표준계약서 활용 등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(7월), 우수 사례 발굴·홍보를 통한 이행 독려 지속

□ 장애요인과 대응방안

- 방송 규제체계 개편, 지상파 UHD 서비스의 활성화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필요
-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하에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과 개선방안 마련 추진

②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

□ 개요

- 다매체·다채널 시대에 정보의 양은 급증했으나 미디어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의 신뢰도 제고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
- **(엄격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)** 지상파·종편·보도PP 재허가(재승인)시,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,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전략 등을 중점 심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재허가(재승인) 여부 결정 및 조건 부가(3월~12월)
 - 보도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‘프로그램 균형편성’(종편PP), 지역성 제고 목적의 ‘지역프로그램 제작’(지역방송) 등 심사항목 신설 및 과락기준 상향(40%→50%)
 - ※ (허가승인 유효기간) YTN·연합뉴스TV(3월), TV조선채널A(4월), JTBC·MBN(11월), 지상파(12월)
- **(방송의 품격 제고)**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여 건전한 방송문화 확립
 -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시상(5월)하고, ‘찾아가는 법규 설명회’ 등 방송사업자 대상 법령교육을 강화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 유도
 -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 유도
 - ※ 공영방송 3사 노사공동 방송작가 특별협의체 구성 방송사별 팩트체크 조직 설치 등 산별협약(‘19.12월)
 - 품격있고 공정한 선거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「제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」 운영(방송통신심의위, ‘19.12.16~’20.5.15 운영)
- **(방송의 지역성·다양성 가치 확립)** 콘텐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소통플랫폼인 지역미디어의 기능 강화

- 지역방송(지역밀착 콘텐츠 제작), 지자체(지역콘텐츠 제작 지원), 지역별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(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)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 구조 확립

※ 3년마다 수립하는 '제3차 지역방송발전계획'에 반영('20.하)

- 유료방송 M&A 사전동의 심사 시 지역채널의 독립적 운영 방안,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역성과 다양성 제고
- SNS·모바일 유통 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 ('20년 40억원)하고,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추진
- (방송 종사 취약계층 권익 보호) 아동·청소년 출연자, 외주제작 인력 등 방송 종사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
 - 아동·청소년 출연자의 노동권, 프라이버시 등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*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재허가 및 방송평가 규칙에 반영
 - * 주요내용 :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, 출연자 신체접촉 및 부적절 언어사용 금지 등
 - 외주제작사 제작인력의 상해·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방송 평가에 반영(11월)

②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

- (공영방송 임원 선임 국민참여) KBS·EBS·방송문화진흥회 이사·사장 선임 시, 국민참여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('20.하)
- (국민이 묻는 재허가 의견청취) 방송사 재허가(재승인) 심사시, 국민들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접수 받아 방송사 대표자에게 직접 질의하고, 답변 공개(『국민이 묻는다』 전용 홈페이지 신설)(3월)
- (국민이 참여하는 공익광고) 공익광고 신규 제작시, 국민제안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(예시 : 안전 및 환경 등)를 적극 반영
 - 유료방송(중편·보도·대형PP)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상향(0.05%→0.1%) 하고, 주시청시간대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 확대 유도(3월)

③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

- (신속·정확한 재난방송) 기존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, 재난 취약계층 배려, 주관 방송사 역할·책임 제고 등 재난방송의 신뢰성·신속성 강화
 -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을 추진하고, KBS가 보유한 재난 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(6월)
 -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육 및 확충,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서비스 제공 확대(6월)
- (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)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 재난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
 - 정확한 미세먼지 재난정보(다큐, 캠페인 프로그램 등) 제공으로 국민 경각심 제고 및 국민 참여 유도(1월~3월, 12월)
- (재난방송 평가 강화) 재허가(재승인) 시 '재난방송 충실성'을 엄격히 심사하고, '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' 등을 방송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 제고
 - 강화된 「재난방송 실시기준」(19.12월) 이행여부를 점검(2월) 하고 재난 상황 발생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방송 실시 점검 강화

□ 장애요인과 대응방안

- 방송광고 급감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난방송 강화 등 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어려움 예상
- 방송 신뢰성 강화와 공적책임 제고는 방송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방송사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재원 확보 지원

③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

□ 개 요

- AI 활성화 등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른 신유형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정책 추진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

- (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) 디지털성범죄 영상물, 음란물·도박·마약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청정 인터넷 환경 구현
 -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가부·경찰청·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내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·차단하고,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여 웹하드사업자 필터링에 적용(1월~)
 - ※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점검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할 경우 경찰청의 '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'을 활용하여 수사심의를 요청하고,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증원(18→30명) 및 필터링 점검 강화(주1회→상시)
 - 마약, 여성폭력, 자살, 저작권, 혐오표현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여가부·인권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 추진
 - ※ 딥페이크, 다크웹 등 신종 기술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등 협력 추진
 -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유도
- (팩트체크 활성화)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
 -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,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
 - ※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를 확립
 - 전국민 대상으로 팩트체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제공하고, 팩트체크 결과물 등에 대한 공모전 개최 지원('20.하)

- (이용자 피해 예방) 음란물·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, 스팸·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
 -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확대 운영, 사이버안심존 개선*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앱 보급을 확대하고,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·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 등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(10월)
 - *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앱에 이용시간 자율 조절기능 및 몸캠피싱 방지기능 도입
 -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팸 차단기법을 고도화하고, 관계기관*에 스팸 데이터 개방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출사기 등 2차 피해 최소화
 - * 한국마사회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금감원, 지자체, 식약처, 한국거래소 등
 - 플로팅 광고, 과도한 모바일 팝업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신유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('20.하)

②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

- (AI시대 이용자 정책 수립)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, 민관 협의체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'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' 운영(1월~)
 -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및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개발 추진
- (이용자 편익 증진)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,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이슈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
 -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(7월),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·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 구축(10월), 재외국민 등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등 통신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
 - 지능형 스마트홈 등의 확산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나 음성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는 AI스피커,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 실태점검(연중)
- (시청자 주권 강화) 참여·공유의 시대가치에 맞춰 시청자의 관점과 권리를 적극 반영하는 능동적 시청자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 강화
 - '시청자 권리 선언문' 제정 및 '시청자의 날' 지정(9월),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치(9월), 시청자위원회 자체운영규정 개선(7월) 등 추진

- **(방송통신교육 강화)** 국민의 방송통신 이해와 활용·제작 역량을 높이고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미디어복지 구현
 - 전 국민에게 균등한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('19년 8개 → '20년 10개 지역으로 확대)하고 인터넷 윤리체험관 구축도 확대('19년 4개소→'20년 5개소)
 - 어린이·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미디어역기능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 확대, 학생·소외계층·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* 및 전국민 대상 계층별 인터넷 윤리교육 제공
- * 미디어교육·체험 인원 확대 목표 : '19년 28만명 → '20년 31만명

③ **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**

- **(장애인 TV시청 접근권 제고)** 디지털 미디어 시대 모든 국민이 방송 콘텐츠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방송이용 환경 조성
 - 시·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(15,000대,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90%), 시·청각장애인(화면해설·자막·수어방송)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 지원
- **(인터넷 기반 장애인방송 활성화)** AI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
 -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운영(7월, 보도분야) 하고 시·청각장애인용 지상파방송 VOD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및 지원('20.하, 7억원)
- **(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지원)** 방송광고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(16.4억원)
- **(통신이용 접근성 강화)** 정보취약계층(노령층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)을 중심으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, 통신서비스별 맞춤형 피해구제 등 교육 콘텐츠 개선(9월)

□ **장애요인과 대응방안**

-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한 규제가 국민에 대한 통제 강화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,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 경주
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① 미디어 복지 실현으로 디지털 포용 국가 지원

- 장애인의 TV 시청 접근권 제고,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확대,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신설 등으로 미디어 복지 강화



② AI 시대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

- 통신분쟁 처리상황 실시간 조회,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등 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스마트홈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



③ 방송의 공정성, 신뢰성, 투명성을 제고

-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시 국민참여, 재난방송 수어통역 확대, 방송출연 아동·청소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



활력있는 방송통신, 신뢰받는 미디어

01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



1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

- 지상파-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및 편성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
- 미래지향적 새로운 방송규제체계 마련
- 규제완화(허가제 → 등록제)를 통한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



2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

-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마켓 MIP TV 주빈국 행사 성공적 개최
- 국내 OTT의 신남방국가 진출 및 한·아세안 OTT로 확대 발전 지원
- 공동제작 협정,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
- 약 9천억원 방송사 콘텐츠 투자이행 유도



3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

-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
- 신유형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

02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



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
-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허가, 재승인 심사
-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 확대
- 아동, 청소년 방송 출연자 권익 보호



2 방송정책 국민참여 확대

- 공영방송 임원 선임 시 국민참여·투명성 강화
-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 심사 시 국민 질의 창구 운영
- 공익광고 제작 시 국민관심사항 반영



3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

-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육·확충 및 영어자막 제공 확대
- 겨울철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
- 재난방송 평가 강화

0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



1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

- 범부처 성범죄 영상물 식별 공동DB 확대를 통한 웹하드 필터링
- 지능화된 스팸,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 불편 해소
-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



2 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강화

-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운영 및 민간, 국제 공조로 AI 역기능 사전대응
- 스마트홈 등 신규 지능형 서비스 개인정보 침해 선제적 대응
-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



3 방송통신소외계층지원강화

-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(15,000대,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90%)
- AI 기반 음성 → 자막 자동 변환 서비스 개발 및 운영
- 시청각장애인용 지상파방송 VOD인터넷 서비스 확대